

서울의 저항과 대안의 공간 및 운동 변화 분석*

Analyzing Changes in Space and Movements
for Opposition and Alternatives in Seoul

박인권**·이선영***

근래 들어 발생한 용산참사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서울의 시민사회를 둘러싼 권력관계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한편에서는 국가-시민사회의 관계가 억압-저항의 관계로, 다른 한편에서는 협력-참여의 관계로 완전히 상반되게 나타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양면성의 근원을 찾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변화해온 시민사회의 저항과 대안의 공간 및 운동의 변화를 국가-시장-시민사회 삼각관계라는 틀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특히 우리는 민주주의의 확대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이라는 모순적 계기가 한국의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의 변화를 규정해왔고, 이러한 모순적 계기가 시민사회를 둘러싼 권력관계의 양면성을 초래하고 있음을 규명한다. 그리고 국가의 기회주의적 행태, 서울의 도시사회운동의 제도화, 지방정치체제의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의 동요, 참여적·저항적 운동방식의 공존 등의 현상은 이러한 모순적 계기의 산물임을 밝혀낸다. 이러한 발견들로부터 우리는 서울시민의 운동에 대한 실천적 의미를 도출한다.

주요어: 시민사회, 국가, 시장, 시민운동, 신자유주의

* 이 논문은 2012년 11월 16일 한국공간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조교수(ikpark@uos.ac.kr; 제1저자)

*** King's College London 지리학과 박사과정(seon_young.lee@kcl.ac.uk)

1. 서론

근래 들어 서울에서는 지역개발 또는 재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 권력과 주민 사이의 관계에 관한 상반된 두 가지 초상이 목격된다. 2009년 1월 발생하여 ‘용산참사’라고 불리는 용산4구역 남일당 화재사건에서는 시 정부와 개발업자들의 일방적 도시정비 사업의 추진과 이에 저항하는 세입자와 철거민 운동단체 회원들에 대한 국가권력의 폭력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불과 3년 후 같은 도시 서울에서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과 지역발전이 ‘시대적 화두’인 양 회자되고 있고, 서울시 정부에서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라는 공식적 사업으로 이를 제도화하고 있다.

한편에서 주민들은 계도하거나 때로는 강제적으로 행위를 제약해야 할 대상이었다가, 다른 한편에서 그들은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주체이자 원동력으로 변신한다. 한편에서 시장(market)과 정치권력이 결탁을 하고 주민들(또는 시민사회)은 주변화되었다가, 다른 한편에서는 개발업자와 시장이 주변화되고 시 정부와 주민이 협력하는 형국이다. 물론 둘 사이에는 서울시장의 교체에 따른 레짐(regime)의 변화가 있었지만, 동일한 도시, 서울에서 불과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다른 두 모습이다.

이처럼 21세기 서울에서 목격되는 모순된 두 모습을 금방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2011년 지방 보궐선거에 따라 민주적·개혁적 시장(mayor)이 취임했다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토록 짧은 시간 만에 그토록 상반된 모습이 발견된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 이미 그 두 가지 상반된 관계가 동시에 존재하며, 특별한 계기에 따라서 하나의 모습이 우세하게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순된 모습들의 단편들을 따로따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러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근본적 질서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사실 서울의 이러한 모순된 모습 이면에는 한국사회의 국가(the state)-시민사회(civil society)-시장(the market) 간 관계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과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시민사회의 영역과 영향력이 확대된 반면, 개발연대에 형성해온 강력한 국가주도의 리더십과 아젠다 형성능력은 약화되어왔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 수출확대와 같은 발전국가론은 그 강도와 시민사회의 수용정도가 현저히 약화되었고, 시민사회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대되어왔다. 특히 1991년 지방의회 선거의 부활과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선출이라는 지방정치체제의 변화는 서울이라는 도시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활동공간이 확대되는 데 기여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시장의 자유와 자본의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라는 시장의 요구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형태로 전 세계를 휩쓸어왔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한국사회 또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하여, 국가는 시장의 이러한 요구에 일정 정도 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가는 시민사회와 시장 양쪽에서 상반된 요구를 받으며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위태로운 균형은 때로 모순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주민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 질서는 서울에서 전개되고 있는 주민들의 다양한 운동들을 규정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따라서 서울에서 전개되고 있는 주민들의 저항과 대안 형성을 위한 다양한 운동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서 언급한 주민-시장-정치권력의 상호관계에 관한 모순적 모습의 근원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모순된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여, 21세기 서울의 주민과 정치권력, 시장 사이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주민들의 저항과 대안의 운동 공간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우리는 서울시민의 저항/대안 운동의 변화를 국가(the state)-시민사회(civil society)-시장(the market) 간 관계의 변화 속에서 조망하고, 저항/대안 운동공

간이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이에 따라 운동의 양상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는 국가-시민사회-시장의 관계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기이자, 현재의 주민들의 운동을 규정하는 변화가 실현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살펴볼 주민운동들은 도시라는 장소성을 기반으로 하는 운동, 즉 주거권 운동, 영세상인 및 노점상 운동, 지역공동체 운동, 생활협동조합 운동 등으로 국한하고자 한다. 물론 주민들의 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함께 고찰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논문, 보고서, 신문자료와 같은 문헌과 각종 통계자료를 참조하고, 주요 운동단체들의 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도 수행한다.

다음 장에서는 시민사회의 활동공간과 운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로서 국가-시민사회-시장의 삼각관계와 운동공간 변화의 계기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한다. 3장에서는 지난 20년간 서울 시민의 저항/대안운동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한다. 4장에서는 서울시민의 저항/대안 공간의 변화를 이론적 틀에 따라 분석하고, 5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서울시민의 저항/대안운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결론을 맺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시민사회의 활동공간과 변화의 계기들

서울시민의 저항과 대안의 공간 및 운동의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분석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시민사회의 활동공간을 이해하는 이론을 살펴본다. 시민사회를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이러한 관계에 변화를 초래하는 흐름으로써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확대

의 의미를 고찰한다.

1) 국가-시민사회-시장의 관계

흔히 사회적 실천이 전개되는 영역은 국가, 시민사회, 그리고 시장으로 구분된다. 국가는 정치적 관계에 따라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영역이고, 시장은 경제적 활동이 일어나는 영역이며, 시민사회는 경제나 정치과는 다른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영역을 의미한다. 물론 이 세 가지 영역들이 완전히 구별되어 독립적 영역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존재한다.¹⁾ 특히 전통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시민사회와 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국가와 시민사회(또는 시장)만이 존재한다고 보고, 계급운동을 시민운동과 동일시한다(조대엽, 1995).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패러다임은 확장된 시민사회의 영역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사회운동과 같은 비경제적 운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시장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서 시민사회를 인식하고 시민사회의 비판적 기능을 강조하는 논의가 많다(Walzer, 1998; Lasch, 1996; Cohen & Arato, 1992).

사회적 실천이 전개되는 세 영역 중 시민사회는 흔히 국가나 시장으로부터 구별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들과 네트워크들을 의미한다. 이 경우 시민사회는 사회를 이해하는 데 이용되는 분석적 모형으로서 존재하며, 여기에는 “매우 상이한 유형의 NGO들, 노동조합들, 정당들, 교회와 기타 종교단체들, 전문집단들과 비즈니스 결사체들, 공동체와 자조집단들, 사회운동들과 독립미디어들”이 포함된다(Edwards, 2004: 56). 주민들의 자발적 결사로서의 운동조직과 그들의 공공역역(public sphere)에서의 활동으로서 운동을 바라볼 때, 주민들의 저항과 대안의 운동은 ‘시

1) 예컨대 Storper(1998)는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국가-시장-시민사회가 독립적 영역으로 존재하지 않고 복잡한 합성물(hybrids)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민사회(civil society)'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시민사회를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영역으로 보고 시민사회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한 것은 자유주의 진영과 마르크스주의적 진영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유주의자인 도크빌(Alexis de Tocqueville)과 그를 따르는 신도크빌주의자들은 시민사회가 협동과 신뢰의 증진과 같은 규범적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곧 '좋은 사회' 또는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적인 것들로서 시민사회의 건강한 결사체들에 의해 증진된다고 믿는다. 예컨대 Putnam(1994)은 시민사회의 비정치적 조직조차 민주주의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조직들은 사회적 자본, 신뢰, 공유된 가치를 형성하는데, 이것들은 사회통합을 돕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시민사회는 마르크스주의자인 그람시(Antonio Gramsci)와 그를 따르는 신좌파에 의해서도 옹호된다. 그는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시민사회는 자본주의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데 필요한 문화적·이데올로기적 자본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시민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많은 신좌파 학자들은 이러한 그의 의견을 따랐다(Ehrenberg, 1999). 요컨대 이들 좌·우파 시민사회주의자들은 시민사회가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사람들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²⁾

2) 시민사회 자체가 국가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Abu-Lughod(1998)는 시민사회의 “어떤 결사조직들은 매우 존경할 만하지만, 어떤 결사조직들은 완전히 사악”(p. 12)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Storper(1998)는 “시민사회의 형태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고 분권화된 형태)가 반드시 그러한 목소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p. 240)고 주장한다. 시민사회가 과연 민주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시민사회 행위자들은 누구도 직접적으로 선출되는 것 없이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여왔기 때문이다(Zaleski, 2006; Agnew, 2002). 그럼에도 규범적 모형으로서의 시민사회는 ‘좋은 사회’의 모형으로서 존재하며, 다른 두 영역, 즉 국가와 시장에 가로지르는 실천을 통해 이러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Edwards, 2004)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사회적 실천의 영역으로서 시민사회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세 영역이 고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실상은 이 세 영역은 체계적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한다.³⁾ Sommers(2008)는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삼각 모형(triadic model)을 통해 이러한 체계적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특히 그는 시장이 어떻게 시민사회의 상호관계(reciprocities)를 붕괴시키는지, 국가가 사회보장과 시장의 규제를 통해 어떻게 활발한 시민사회를 유지하도록 돕는지 등에 관심을 갖는다. 특히 그는 시민사회의 건강한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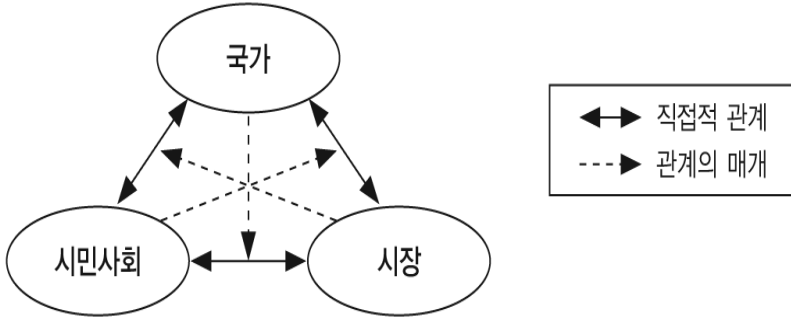
시민사회가 시장의 침입에 저항할 수 있는 역량은 시장규제, 사회보장 정책, 공공서비스, 재분배적 세금, 생존권의 제도화와 보호를 위한 법적 메커니즘 등의 형태로 이뤄지는 국가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p. 31).

그의 모형에서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로서 존재하고 이 영역의 성패는 국가의 지지에 달려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형은 국가의 이중적 본성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다. 다시 말해 국가는 시장의 무자비함을 견제하면서 진보적 사회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시장을 옹하면서 퇴행적 사회변화 역시 가져올 수 있다(Yiftachel, 1998). 또한 시민사회가 국가와 시장의 완충지대로 존재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국가가 시민사회와 시장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Wright(2010; 2011)는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에 관한 좀 더 완전한 형태의 삼각 모형(a full-fledged triadic model)을 제시한다. 이 새로운 모형에서 각 영역은 다른 두 영역 사이에서 두 영역들의 상호작용을 규정짓는 매개 역할을 한다. 이 모형에서는 더 이상 국가가 시장과

3) 이 세 영역의 상호작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세 영역을 독자적 개념적 범주로 정립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림 1> Wright의 국가-시장-시민사회 모형



자료: Wright, 2011: 407; 화살표에 대한 설명 추가

대립하는 영역으로 그 역할이 국한되지 않고, 때로는 시장과 시민사회에서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 가능하다.

Wright(2011)는 Sommers가 설명하고자 한 문제, 즉 시장 근본주의의 승리가 시민사회의 시민권의 기초를 어떻게 위협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국가가 시민사회와 시장의 사이에서 이 둘의 관계를 중재하는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회통합과 민주적 시민권 체제를 위해서는 국가-시장-시민사회 세 영역 사이의 권력 균형(balance of power)이 아니라 국가와 시장의 권력 모두를 시민사회로부터 나오는 권력에 종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즉, 진정한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가권력이 시민사회의 권력, 즉 집합적·협력적 행위 역량에 기초하는 권력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Wright(2010)가 제시한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삼각 모형은 서울이라는 도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주민의 저항과 대안을 위한 운동이라는 사회적 실천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물론 이 모형은 한 사회 전체 시스템을 설명하는 모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Castells(1977)이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시 시스템(urban system)은 사회 전체 시스템(total system)이 한 공간 단위에 표현된 축소판(microcosm)이기 때

문에, 전체 사회가 작동하는 원리가 도시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 사실 그가 도시를 이해하는 데 도입했던 세 수준인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는 각각 국가, 시장, 시민사회에 대응된다. 다만 한 도시 차원에서 정치영역은 ‘지방정부’라는 형태로 표현되므로, 우리는 이 연구에서 국가 및 지방정부를 하나의 영역으로 보고,⁴⁾ 시장과 시민사회를 나머지 두 영역으로 파악하여 도시사회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들을 통해 서울의 저항과 대안운동을 바라보면 그 동학이 잘 이해될 수 있다. Edwards(2004)가 강조한 바와 같이 시민사회에서의 실천이 ‘좋은 사회’를 창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세 영역 사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천, 즉 공공영역에서의 숙의(deliberation)와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이는 서울이라는 구체적 도시공간에서 시민운동 또는 주민운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도시공간에서 시민사회는 국가(지방정부)와 시장의 권력에 저항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공공영역에서 숙의하는 형태로 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과 관계설정을 맺으며, 다른 두 영역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적절하게 변화·발전한다. 그 형태는 주민운동 조직과 실천의 변화로 나타난다. 따라서 주민운동의 변화와 발전은 바로 사회적 공간으로서 시민사회, 그리고 다른 두 영역의 관계 변화 속에서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세 영역 간 관계변화의 계기들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를 Wright의 모형에 따라 파악할 경우 이

4) 이 분석들에서는 지방정부가 별도의 영역으로 존재하지 않고 국가가 만들어 낸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활동하는 국가의 하위 기제로서 위치한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는 국가영역에 속한다고 본다. 지방자치의 확대에 따라 지방정부가 국가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고 지역 시민사회에 대한 책임성이 증대됨에 따라, 그 위치가 시민사회 쪽으로 이동할 수 있으나 여전히 국가가 정한 틀 내에서 활동해야 하는 제약으로 인해 국가의 영역에 위치시키는 것이 좋겠다.

러한 관계를 변화시키는 계기들은 곧바로 시민사회의 여러 운동들의 내용과 형식을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 운동의 변화는 이러한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계기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이 세 영역 간 관계변화를 규정하는 대표적 계기들로는 세계경제의 불황과 경제의 위기에 따른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한국을 비롯한 후발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사실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모호한 개념이다(Boas & Gans-Morse, 2009). 대체로 케인스주의적 시장규제와 국가개입에 대한 반작용으로 흔히 자유방임형 경제, 자유 무역, 민영화, 탈규제, 민간 부문 역할의 확대 등을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을 의미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의 확대에 따라 급속히 확산된 케인스주의적·복지국가적 노선은 1970년대 오일쇼크와 세계적 규모의 경제불황 이후 일대 전환을 맞게 되었다. 경제성장의 둔화와 국가재정 적자의 심화는 시장으로 하여금 국가의 축소와 경제의 자유 확대를 요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대 대처리즘(Thatcherism)과 레이저노믹스(Reagonomics)와 같은 새로운 정치·경제 체제가 등장했고, 자본과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와 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수정이 이뤄지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과거 시장의 압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투쟁을 통해 얻어낸 국가의 사회적 프로그램들을 후퇴시켰고, 시민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가 시장적 가치를 강조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경우 시민사회는 시장과의 관계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Sommers(2008)가 우려한 바와 같이 시장근본주의는 시민사회의 가치와 상호성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Jessop(1982)의 개념화에 따르면, ‘축적’의 위기에 직면한 국가는 시민사회의 ‘정당성의 요구’를 무시하더라도 체제의 유지를 위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과 같은 후발 민주국가에서 목격되는 국가 권위주의 체제의 해체와 민주주의의 확대의 흐름이 존재한다. 과거에 한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국가가 강력한 주도권을 쥐고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모형이 주류를 이루었다(Johnson, 1982). 이 국가들은 시장질서의 형성을 돕고 국민경제를 계획하는 역할을 하면서 시장과 명시적·암묵적 결탁관계를 유지했다. 이 속에서 시민사회는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고 국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활동했다. 그 범위를 넘어서는 활동과 요구를 할 경우 시민사회는 국가로부터 체계적으로 무시·배제되거나 억압되었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 지속되어 온 경제 성장과 정보화의 진전은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빈곤에서 벗어난 시민들은 여가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를 활용하여 자유로운 시민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정보화는 시민사회 내 정보의 유통과 소통을 진작시켜서 자유로운 결사체들이 형성되는 것을 더욱 촉진시켰다. 이에 따라 함께 성장한 시민사회는 국가주도의 이러한 발전모형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시민사회에서 성장한 개인의 행복 및 권리에 대한 의식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요구하고 경제적으로는 복지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한국에서 1980년대 후반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일련의 민주화의 흐름은 바로 이러한 발전국가의 해체 과정과 궤를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발전국가의 퇴색과 권위주의 해체, 민주주의의 확대는 물론 시민사회에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한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과의 결탁관계에 있던 국가로 하여금 시민사회의 요구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여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예컨대 노동 조건의 개선, 임금인상, 삶의 질 제고, 사회적 안전망의 확대 등과 같은 요구를 국가가 직접 수용하거나 시장에 이를 수용하도록 중재에 나서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확대는 사실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상반된 힘으로 작용한다. 신자유주의는 국가로 하여금 시장의 요구에 빠르게 반응하도록 하는 반면,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반된 힘은 때 시기 균형을 이루기도 하지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모순적 현상들을 만들어 낸다. 특히 이러한 모순은 도시공간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Brenner et al.(2012: 9)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시공간은 “자본주의의 미래에 관한 각축이 벌어지고 있는 전장이자 매개공간이고 경쟁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서두에서 제시한 서울의 시민사회를 둘러싼 모순적 권력관계들이 실상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를 규정하는 이러한 상반된 계기로부터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히게 될 것이다. 먼저 국가는 시장과 시민사회 사이에서 매우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고, 정치체제는 시장과 시민사회에서 줄타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증대된다. 다음으로 다양한 도시사회운동들은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얻어낸 확장된 활동공간을 활용하여 체제 내적인 활동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와 함께 끊임없이 영역을 확대하는 시장과 이에 포섭된 국가에 대한 저항운동 역시 지속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운동의 방식은 구체적 지방정치체제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방정치체제가 시민사회와 시장 사이에서 동요함에 따라 지배적 활동방식 또한 함께 변동하게 된다.

3. 문민정부 이후 서울시민의 저항/대안운동 역사

이 장에서는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서울시민의 저항과 대안을 위한 운동을 한국의 대표적 도시사회운동인 주거권 운동, 영세상인 및 노점상 운동, 지역공동체 운동, 생활협동조합(생협)운동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⁵⁾ 우선 주거권 운동이나 영세상인 및 노점상 운동과 같은 저항

운동들은 지난 20년간 제도적 영역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짐에 따라, 혁명적 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이 약화되고 합법적 공간 내에서 법과 제도의 개혁과 대안을 추구하는 운동이 강화되어 왔다. 또한 지역공동체 운동과 생협운동 등 대안운동은 확대된 시민사회 공간 내에서 새로운 대안적 사회질서를 실험적으로나마 실현하기 위한 시도로서, 이 시기 양적·질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거두어왔다.

1) 주거권 운동

1980년대 각 지역별로 진행되어 오던 철거반대운동은 1990년대 들어서 도시 재개발로 인한 각종 폐해와 비리를 개선하고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좀 더 광범위한 운동으로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노선과 운동 방식을 가지고 있는 운동조직이 탄생하고 변화·발전의 과정을 겪게 된다. 1990년대에 생겨난 대표적인 조직들로는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1990년 창립, 약칭 주거연합), 전국철거민협의회(1993년 창립, 약칭 전철협), 전국철거민연합(1994년 창립, 약칭 전철연) 등이 있다.⁶⁾ 2000년대 들어서는 (사)주거복지연대(2001년 창립)와 (사)나눔과 미래(2006년 창립) 등이 조직되어 주거권과 관련된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이들 주거권 운동조직의 변화는 철거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전투적 조직들의 쇠퇴와 제도개혁 및 자활운동 등 합법적 운동을 하는 조직들의 발전으로 특징지어진다.

5) 이 네 가지 운동영역은 사실 한국의 도시사회운동의 핵심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도시연구소(1999)에서 발간한 『지역주민운동 리포트』에서도 확인된다. 환경운동도 중요한 시민운동인 것은 사실이나 그 동안 우리나라 환경운동은 반핵운동의 경우에서처럼 주로 전국적 규모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저항운동의 성격이 짙었다. 따라서 서울이라는 장소를 매개로 일어나는 도시사회운동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6) 이 철거민단체들이 결성되기 전인 1980년대 말 서울에는 서울철거민협의회(서철협)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1990년대 형성된 철거민운동 단체들은 서철협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전철협과 전철연을 중심으로 전개해온 철거반대운동을 살펴보자. 이들 두 단체는 각 지역의 철거민 당사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조직으로서, 초기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철거민 출신의 운동가들이 중앙지도부를 결성하고 각 지역의 철거민들과 함께 투쟁을 전개해왔다. 철거민들은 자기 지역의 투쟁이 끝나면 대부분 자신의 삶터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체를 운영해갈 활동가를 많이 확대 재생산해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초기의 중앙집행부를 구성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단체의 규모나 활동 역량이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다. 이러한 철거반대운동의 세력 약화는 우선 공공임대아파트의 무 건설이 제도화되면서 과거와 달리 전체 세입자가 아닌 소수만이 철거반대운동에 참가하게 되면서 투쟁 동력이 약화된 데 따른 것이었다. 또한 1980년대까지 존재하던 대규모 불량주택 밀집지역이 대부분 사라지고 소규모 지역만이 남게 되어 운동의 활동지역이 축소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1990년대 철거반대운동은 재개발 기간 내 세입자들을 위한 임시거주시설(가이주 단지)의 확보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미해당자 문제를 중심으로, 수도권 신도시 개발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의 재개발지역 또는 택지개발지역에서 활동을 이어 왔다. 1980년대 운동의 결과로 정부는 1989년에 25만 호의 영구임대주택 건설정책을 도입했고, 서울 시도 재개발지역에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1993년 영구임대주택이 보증금과 임대료가 비싼 공공임대아파트로 변화되면서, 철거지역의 세입자가 실제로 입주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로 인해 두 단체는 철거민의 생활수준에 맞는 임대아파트 건설⁷⁾을 운동의 중요한 의제로 삼아 투쟁을 전개했다.

7) 전철협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하, 보증금에 대해 장기 저리 융자 제공,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보증부 월세보다는 전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전철연은 주거세입자의 수준에 맞는 영구임대아파트 공급, 상가세입자들에게 임대상가와 임시시장 건립을 통한 상가세입자 생계대책보장과 순환식개발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뉴타운 개발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개발의 붐이 일면서 많은 지역들에서 1980년대 합동재개발 때와 같이 대규모 철거가 시행되거나 시행이 예상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철협과 전철연을 중심으로 하는 철거반대투쟁이 활발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강력한 활동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 주된 이유는 과거에 비해 주거세 입자를 위한 임대아파트 입주권, 주거보상비, 이주비 등과 같은 대책이 수립되어 세입자들이 대규모로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뉴타운 재개발에서는 합동재개발과 달리 세입자가 아닌 가옥주가 철거민이 되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체 전국단위의 조직(예컨대 전국뉴타운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을 결성하여 과거 철거반대투쟁 단체와 거리를 두면서 개발반대 운동을 진행하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철협과 전철연을 찾는 주민은 주로 미해당자(임대주택 무자격자, 무허가 가옥주)와 상가나 공장 세입자들로서 철거반대운동의 핵심주체가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그와 함께 소규모 토지 및 가옥 소유주의 보상 문제가 활동의 내용을 이루기도 했다.

전철연과 전철협 모두 (재)개발지역 내에서 철거반대운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을 교육하고, 지원활동을 하는 현장 중심 단체이지만, 서로 활동방향과 노선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철협의 경우 철거민을 개발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주거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여 철거민들을 위한 정책을 이끌어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철거민 운동과 더불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토론회 주최, 시민사회단체들(토지정의실천시민연대, 성정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등)과의 연대, 부동산투기꾼 10인 선정 발표 등의 활동을 하면서 다른 철거민 단체와 달리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호승 대표 인터뷰, 2012.10.30). 다소 온건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전철협과 달리 전철연은 급진적 성향으로 과격한 방식의 투쟁(골리앗·망루 설치, 새총 및 인화물질 사용)도 전개하고 있다.⁸⁾ 이

8) 이러한 투쟁방식은 불법폭력 시위이며, 용산참사와 같은 희생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남경남 의장은 <<한

와 더불어 철거민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도 단체의 활동방향과 노선에 영향을 주었다. 전철연은 “강제철거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생존권을 약탈당하는 노동자 계급 탄압으로, 철거민투쟁이 그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토지·주택정책의 본질인 자본가계급의 노동자계급 수탈을 깨부수고 임금노동체제를 끝장내야하는 계급투쟁”으로 간주한다(전철연, 2004: 15). 이 단체는 노동자 문제는 곧 철거민의 문제라는 입장으로 다른 노동자운동, 희망버스 등의 연대활동에 참여하고, 빈곤사회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노점상연합 등과 연대활동을 해왔다.

이러한 두 단체의 저항적 또는 전투적 운동방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형식과 주체의 주거권 운동을 모색하고자 하는 단체가 주거연합이다. 주거연합의 경우에는 천주교도시빈민회,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에서 활동하던 지역활동가와 주민들로 구성되었다. 전철협이나 전철연과 비슷한 시기에 창립하여 활동을 해왔으나 주거연합의 활동내용은 다른 두 단체와 차이가 있다. 1990년 중반까지는 전월세 폭등, 철거지역 지원 등 주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운동식의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재개발과 철거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세입자와 가옥주 중심의 주민운동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다른 단체들이 과거 지도부가 유지되고, 활동가들의 확대 재생산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달리, 주거연합은 지역주민 대표들을 중심으로 활동함으로써 지역 주민들 중에 조직의 핵심 활동가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으로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신동우 위원장 인터뷰, 2012.10.28).

주거연합은 철거지역 주민의 조직지원, 교육사업과 더불어, 철거 이후 지역주민사업, 주거권 관련 정책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철거민이 재개발 이후 임대아파트 내에 거주하면서 새롭게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온 것이다. 임대 아파트 주민의 자족기능

겨레 21》과의 인터뷰에서 구체적 투쟁방식은 해당 지역의 철거대책위 차원에서 결정하며, 1994년 이래 전철연이 투쟁해서 승리한 지역 중 70% 가까이는 철탑이나 망루 없이 합법적으로 투쟁한 지역이라고 지적했다(안수찬, 2009.2.9).

을 높이기 위해 임대아파트 주민 교육, 일자리 사업, 공부방 운영과 같은 공동체 운동, 자활 운동을 진행했다. 철거민들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서 모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권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임대차보호법문제(전월세)나 주거에 대한 최소 기준선을 제정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운동(1997년) 등이 그 예이다.

이처럼 전철협, 전철연, 그리고 주거연합이 1990년대 각자의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주거권 운동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면, 2000년대 들어서는 이들과 성격을 달리한 새로운 주거권 단체들이 생겨났다. (사)주거복지연대(2001년 창립)와 (사)나눔과 미래(2006년 창립)가 그 예이다. 이들은 현장 중심의 철거민 지원 활동에서 벗어나서 주거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활동영역으로 삼고 있다.

주거복지연대는 임대주택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비타트(HABITAT) 정신 실현이라는 목표에 따라 실제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해왔다. 창립 초기에는 주택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⁹⁾와 이를 위한 주택법 개정 추진 운동을 전개했으며, 주택금융 문제와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지역에 적합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된 활동방향으로 설정하여 2005년부터는 국민임대주택 내 방학 중 맞벌이 가정 또는 결손가정의 결식아동의 식사문제 해결을 위한 ‘엄마손 밥상’ 프로그램을 LH공사와 함께 추진했다. 두 곳의 임대아파트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2012년 현재까지 전국 88곳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를 통해 단지 및 지역 사회의 유휴인력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대주택 단지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기업의 기틀을 잡은 주

9) 이 운동에는 주거복지연대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도시연구소 등 총 14개 시민사회·종교단체가 참여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03년 6월에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이 삽입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거복지연대는 고용과 육아를 비롯한 생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2007년부터는 임대아파트 단지 내 방과 후 공부방과 일자리 사업¹⁰⁾을 전국 14개 생활복지센터에서 실시하여왔다.

나눔과 미래는 노숙인의 자활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오던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단체로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하게 다양한 사업을 진행 해오고 있다. ‘아침을 여는 집’을 모태로 한 나눔과 미래는 초기에는 노숙인, 쪽방거주자를 위한 단신자 매입임대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성북주거복지센터’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약자들을 위한 주거상담(긴급임대료, 소액보증금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을 해오고 있다. 저소득 주민의 자활을 위한 양천자활지원센터,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재가요양사업을 제공하는 행복한 요양센터, 뉴타운 재개발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한 뉴타운 주민 지원센터 활동에 이르기까지 집과 관련한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해오고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네 단체와 비교할 때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겪는 주거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주거복지와 관련한 광범위한 사업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단체들처럼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주민들과 접촉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주거권 운동이 있다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좀 더 노력을 기울이는 주거권 운동 단체가 1990년대 이래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한국도시연구소(1994년 설립)가 그 대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빈민연구소에서 시작한 한국도시연구소는 때로는 철거지역에서 현장 지원(철거민 단체와 철거민 조직 지원)활동을 하기도 했으나, 주로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법 개정 활동(불량주거지 개

10) 예컨대, 광주 밀반찬 제조 판매 생활 공장, 화성 비누 및 폐현수막 생활용품 공장 등이 있다.

선을 위한 특별법, 주거기본법, 최저주거기준법, 임대주택법 개정), 주거복지에 대한 사회여론을 환기하여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게 실태조사서(예: 주거빈곤집단실태연구)와 정책 자료집(예: 공공임대주택정책) 발간, 공청회 주최 등의 다양한 주거권 운동을 전개했다(남원석, 2004; 신명호, 2004). 이처럼 한국도시연구소는 법,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중심의 시민단체들을 비롯한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교류·연대활동을 진행했다. 1996년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세계인간정주회의에 다른 주거권 운동 단체들과 함께 참여하여 국제연대활동도 시작함으로써, 주거권과 주거복지에 대한 사회인식을 넓혀가기 위한 주거권 운동을 진행해왔다.

2) 영세상인 및 노점상 운동

주거권 운동과 함께 서울에서는 영세상인 및 노점상들의 운동 또한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 운동 역시 철거반대운동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자신들의 절박한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자신들의 시민권을 보장받기 위해 매우 격렬한 방식의 저항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운동이 발전해감에 따라 운동방식을 다양화하고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는 등 확대된 시민사회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해왔다.

1980년대 추진된 각종 국제 행사로 인해 환경미화라는 명목하에 대대적인 노점상 단속이 강화되었다(최인기, 2012a). 이를 계기로 각 지역에서 노점상들이 조직을 형성했고, 각 지역 조직을 통합하여 1988년 전국노점상연합회(2004년 전국노점상연합으로 변경, 약칭 전노련¹¹⁾)을 결성하여 노점상의 생존권 투쟁을 조직화하고 체계적으로 전개했다. 노점상 폭력단속 규탄 및 철거 투쟁과 같은 물리적 투쟁과 더불어, 1993년 청와대 항의 방문 및 청와대 비서관과 면담 진행, 노점상 자립 합법화 청원, ‘노점상에 대한 절대·상대 금지구역 철폐와 합법화 촉구대회’ 등을 통해 노점상

11) 전노련은 2009년 내부 조직 내 문제로 인해 전노련과 민노련(민주노점상전국연합)으로 분리되었다.

의 생존과 권익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전노련, 2007).

뿐만 아니라 각종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빈민의 이해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후보를 출마시켜 노점상 문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고 논의하고자 했다. 1995년에 발생한 장애인 노점상들의 분신 또는 의문사 사건은 장애인의 생존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최인기, 2012b). 이후에도 계속 투쟁과정에서 분신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1999년에는 전철연과 함께 전국빈민연합을 제출범시켜 도시 빈민 생존권 탄압에 대해 함께 연대하고, ‘용역 깡패’라는 사회구조적 폭력을 문제화시켰다(최인기, 2012c).

2000년대 들어서도 청계천 복원 사업을 비롯한 각종 도심 재개발 사업, 월드컵과 APEC 등의 각종 국제 행사,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점상 관리 통제 대책이 실시됨으로 인해 노점상에 대한 단속과 통제가 더욱 심화되었다. 그로 인해 많은 노점상들의 투쟁이 가속화되고 심화되었는데 이 시기의 새로운 특징으로 국제적인 조직과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최인기, 2012b). 2002년 2월 인도 캘커타와 1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국제노점상연합(International StreetNet) 대회에 각각 3명의 한국 측 노점상 대표가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3월에는 국제노점상창립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다른 국가와 노점상 정책을 공유했다. 이때 초대 의장으로 김홍현 전노련 전의장이 선출되었고, 각국의 정부, 상인단체, 자치단체, 그리고 ILO(국제노동기구) 등을 포함하는 국제적인 조직에 노점상의 생존권 문제를 알리고자 했다(전노련, 2007).

3) 지역공동체 운동

기존 체제에 대한 저항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철거반대운동이나 영세 상인 및 노점상 운동과 달리, 1990년대 초반 서울 외곽의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적 활동과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자활공동체 운

동이 대두되었다.¹²⁾ 이들 자활공동체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몇몇 지역에서는 이 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아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갔다. 지역공동체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의 환경, 교육, 정치 사안과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지역자치운동이 활발해지는 사례도 생겨났다. 여기서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부침을 거듭하며, 지금까지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이어져오는 생명살림자치성동주민회(이하 성동주민회), 관악주민연대, 그리고 성미산마을의 사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사례 1: 생명살림자치성동주민회

1990년대 초 성동구 금호, 행당, 하왕동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개발이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대규모 철거에 대항하는 세입자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과 1980년대부터 이 지역에서 빈민운동을 해오던 활동가(공부방, 탁아방의 실무자)들이 함께 철거투쟁을 진행했다. 철거반대 투쟁으로 주민들이 가이주 단지를 얻어내면서 주거권 운동의 의미를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 경험은 지역주민운동으로 확대되면서, 1995년 주민협동공동체를 탄생시켰고 협동조합 방식의 공동체운동을 가이주 단지에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성동주민회, 2011). 논골 신용협동조합을 시작으로 논골 의류생산협동조합, 논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그리고 사회복지 협동조합으로 지역아동청소년센터, 성동자활센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동을 해왔으며 2010년 사단법인으로 재창립했다(권은정, 2009; 성동주민회, 2011). 이와 함께 성동 주민 단오한마당(1999~2007), 논골 주민문화마당 및 우리 동네 영화제 등의 지역 축제 개최, 성동 평화의 집을 통한 지역복지 활동, 성동구 참여자치연대회의 참여를 통한 구의정 및 예산 감시활동 등 다양한

12) 상계동의 봉제사업 공동체인 '실과바늘'과 봉천동의 건축 공동체인 '두레건축'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외부 환경적인 요인(지역해체)과 경제적 경영마인드 및 운영의 미숙으로 인해 실패했다.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지역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운동으로서, 1호 사랑방 ‘하늘나무’를 2011년 4월에 개소하여 지역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확대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례 2: 관악주민연대

관악주민연대 역시 성동주민회와 유사하게 1990년대 관악구 지역의 재개발 과정에서 철거와 생존권의 위협에 놓인 지역주민들과 그 지역 활동가가 모여 지역 정치 참여의 활성화와 지역주민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1995년에 결성되었다. 이어 재개발 이후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 지역 주민들의 자활능력을 높일 수 있는 실업운동, 정책연대 활동을 진행해 왔다(이종환, 2010). 지역주민의 욕구와 필요에 기반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녹색가게, 공부방 사업, 교육문화 소모임 활동, 도서관 운영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임대아파트 내 지역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봉사단체 ‘라온제나’를 조직하여 마을공동체 및 지역주민 조직화 사업¹³⁾을 추진하여 왔다. 1997년 IMF와 함께 임대 아파트 지역과 지역 주민들의 실업 문제가 커짐에 따라 실업 극복 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 기업 창업과 엄마 청소 공동체 사업 등을 전개했는데 이는 2004년에 관악지역실업자지원센터로 흡수되었다. 이러한 주민공동체 활동을 통해 결집된 지역주민의 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활동도 전개했다. 관악구 참여예산 네트워크를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고, 주민을 위한 의정과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주민모임에 직접 참여하는 등 지방자치운동을 활발히 했다. 이러한 지역활동의 역량이 커짐에 따라 1998년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관악주민연대 활동가가 시의원으로서 당선되기도 했다.

13) 199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로부터 시작하여 관악지역 사회발전센터를 거쳐 지역공동체위원회를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사례 3: 성미산 마을

활동가의 참여로 인해 형성된 앞의 두 사례의 주민공동체 운동과는 달리 성미산 마을은 육아와 교육을 고민하는 소위 386세대의 젊은 맞벌이 부부들로 구성된 20가구가 모여면서 시작되었다(유창복, 2009). 1994년 우리어린이집을 설립하고 함께 대안교육의 실험을 시도하여 초등에서 중등교육에 이르는 성미산학교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2000년 들어서는 유기농 먹을거리 공동구매 사업을 시작으로 한 마포두레 생협 활동을 통해 기존의 소수 사람들만의 커뮤니티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연결되고 지역공동체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생협의 성공은 협동조합방식으로 각종 마을 기업(식당 ‘동네부엌’과 자동차 정비소 ‘차병원’ 등)을 탄생시켰다. 2001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배수지 건설에 맞서 성미산 지키기 운동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지역 내 노인들과도 관계를 확대시켜 나가면서 생협에 이어 한 번 더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마을공동체로 서로 성장·발전하게 되었다(유창복, 2010). 성미산 투쟁의 승리는 지역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어 상시적인 환경 관련 활동을 진행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역 내 문제를 공론화하며 구정활동을 감시하고자 주민자치기구인 마포연대(2004~2007년)를 설립했고, 지역 라디오 방송국인 마포 FM(2005년)도 설립·운영해오고 있다. 이렇게 성미산 마을은 처음에는 소수의 이주민에 의해 시작했지만,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일상의 문제와 각 시기별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마을공동체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유창복, 2010).

4) 생활협동조합 운동

앞서 우리는 지역공동체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활동으로 생협이 존재해 왔음을 살펴보았다. 1980년대 후반부터 전국 각지에 생협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1990년대 중반에는 전국에서 200개가 넘는 지역 생협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시민운동의 모습을 보여주었

다(icoop생협연구소,¹⁴⁾ 2008). 서구의 협동조합이 빈곤한 노동자들의 연대에서 출발한 것과 달리, 한국의 생협은 1980년대 말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한 농산물 개방에 따라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리 농업을 지키고 유기농, 친환경 농업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1990년대 초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을 시도하던 활동가들이 운동의 대중적 기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생협운동을 통한 대중조직의 건설을 꿈꾸면서 생협의 양적 증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사업운영에 대한 이해와 경험부족, 1997년 IMF를 겪으면서 전국 생협의 2/3가량이 소멸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사업연합(현재의 두레생협연합회)과 경인지역생협연대(한국생협연대를 거쳐 현재 icoop생협)이 만들어져 활동해오고 있다(icoop생협연구소, 2008).¹⁵⁾

이처럼 생협연합조직이 결성되어 새롭게 활동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까지는 유기농·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많지 않아 생협의 성장이 빠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 광우병 문제, 중국산 멜라민 분유 등 각종 불량 먹을거리, 유전자변형식품(GMO) 문제 등 식품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터지고, 아토피와 같은 환경적 요소로 인한 질병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먹을거리, 식품안전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기존의 먹을거리에 대한 대안을 찾는 사람들이 생협에 주목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서 참여하는 조합원 수와 매출도 증대되었다. 이 시기 생협운동은 중산층 운동이라는 기존의 비판을 던고 많은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다. 이는 생협이 협동조합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동의 대중화 전략을 채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교육운동, 식품 안전

14) 2012년 11월 현재는 icoop협동조합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에 있다.

15) 이 밖에도 현재에는 한국여성민우회생협, 한살림 등 여러 생협연합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icoop 생협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음을 밝혀둔다.

의 체계 구축,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과 같은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사회운동도 전개하여 성과를 거두었다(김대훈 icoop 대외협력팀장 인터뷰, 2012.10.29).

이러한 성과는 다른 시민사회 운동단체와 달리 생협이 생활현장과 밀접한 운동을 전개하는 까닭에 대중조직을 결성하고 확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협은 사회적 변화를 촉발시키는 데 다른 시민단체보다 상대적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협동조합이 민주주의, 복지, 환경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고, 사회적 배려와 연대라는 정신이 바탕이 되는 운동이기에 각 조합의 이념에 따라 당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많은 조합원들이 같이 목소리를 내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즉, 자발적인 시민들이 모여 만들어진 경제 조직이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협동조합은 민주성과 자주성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신철영, 2012). 이처럼 사회여론과 사회인식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 실제로 조합 활동을 통해 실현가능함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이끌어내고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생협운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서울시민의 저항/대안 공간의 변화 분석

이 장에서는 서울시민의 저항/대안 공간의 변화를 앞서 2장에서 제시한 이론적 틀에 따라 분석한다. 즉,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가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진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한 국적 맥락에서 민주주의의 진전과 국가의 약화, 지방자치의 실시와 시민사회 공간의 확대, 신자유주의 시장질서의 확장 등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분석한다.

1) 민주주의의 진전과 국가의 약화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확대와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은 한국 국가의 성격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군사정부의 퇴진과 함께 등장한 문민정부는 권위주의 정치권력의 해체와 민주주의의 이행을 이끌었다. 고위공직자들의 개산을 공개하고, 정치자금법과 지방자치법 입법을 통해 정치문화의 개혁을 시도하는 등 시민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시민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문민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국가의 주도에 의한 경제성장 패러다임 역시 변화를 맞이하여, 시장과 민간의 주도에 의한 경제 체제로 전환을 시작했다. 문민정부는 스스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캐치프라이즈를 내걸고 이러한 변화를 시도했다. 이는 전반적으로 국가의 약화, 시민사회 및 시장의 성장으로 귀결되었다.

먼저 시민사회는 그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큰 자율성을 얻게 되었고 시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확장되어 시민운동이 활성화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성장한 시민사회에서 중산층을 겨냥하는 온건한 시민운동이 출현했다. 1989년에는 경제정의실현을위한시민연합(경실련)이 출범했고, 1994년에는 참여민주사회를위한시민연대(참여연대)가 출범했다. 이들 운동 단체들은 참여민주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적 색채를 지닌 시민운동조직으로서 이전의 전투적 사회운동단체들과는 구별되었다. 또한 환경, 여성, 교육, 사회복지, 인권, 소비자 문제 등 운동의 소재가 다양화되고 운동조직도 단일화에서 여러 개체로 분리되었다. 공간상으로도 여러 지역을 중심으로 운동이 전개되는 등 시민운동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했다.

강력하고 자율적인 국가를 정치적 기반으로 하여 그 동안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강력한 국가주도의 발전 메커니즘인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역시 권위주의의 해체와 함께 약화되기 시작했다(양

재진, 2005).¹⁶⁾ 민주주의의 확대와 함께 강화된 세계화(globalization)로 인해 세계경제에 노출된 한국의 발전국가 체제가 국제적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자 이러한 흐름은 더욱 거세어졌다. 그리하여 문민정부는 발전국가 체제에서 유지해오던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기제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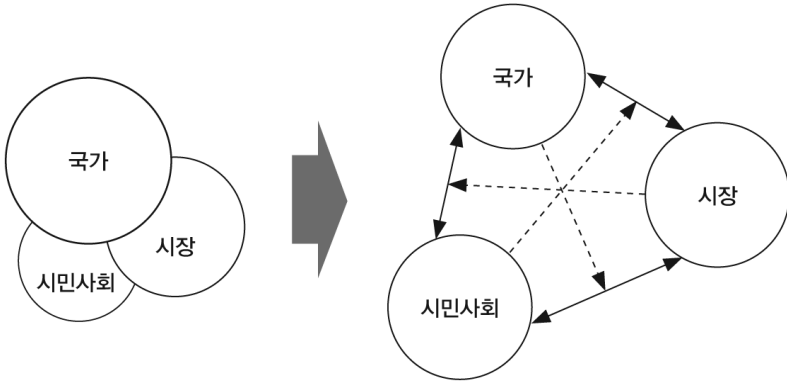
대표적인 조치는 1994년에 이뤄진 경제기획원의 폐지였다. 경제기획원은 1961년에 박정희 정부가 재무부의 예산국과 건설부의 종합기획국의 기능을 이관하여 설치한 부처로서, 국가의 투자계획 조정,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 기능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운용해온 발전국가 체제의 핵심 기구였다. 이의 폐지는 한국의 발전국가 체제 약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어 1962년부터 국가가 수립하여 추진해 오던 계획인 경제개발5개년계획 역시 제7차 계획(1992~1996년)을 끝으로, 1998년 공식적으로 폐지하기에 이른다.¹⁷⁾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의 발전국가 체제의 약화와 민간주도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1997년에 탄생한 국민의 정부와 2003년에 출범한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10 년간의 민주적 통치체제는 문민정부에서 시작된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먼저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적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에 성공하여 탄생한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치로 내걸고 ‘국민의 정부’를 표방했다. 또한 이전에 민주운동 세력의 탄압의 계기로 활용되어온 남북대결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햇볕정책’이라는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기여했다. 이러한 기조는 참여정부를 표방하며 더욱 확장된 민주주의를 추구했던

16) 박배균(2006)은 동아시아의 발전국가들이 신자유주의화에 동의하면서도 발전국가들의 ‘제도적·조절적·담론적 프레임’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17) 국민의 정부가 이 계획을 폐지하게 데에는 당시 구제금융을 제공하던 세계은행(IMF)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권고, 즉 민간 경제활동 자유 보장과 시장경제질서로의 편입, 재정 안정화 등에 대한 권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림 2> 한국의 국가-시장-시민사회 관계의 변화



노무현 정부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그림 2>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군사정부 시절 국가는 시장과 시민사회에 균림하며 사회 모든 영역을 지배하여 왔다. 그러나 군사정부의 퇴진과 발전국가의 후퇴 속에서 시장과 시민사회가 독립적 영역으로서 국가로부터 서서히 분립되기 시작했고, 그 세력 면에서도 이전에 비해 현저히 확대되어 국가와 거의 대등한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민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확장된 활동공간을 얻게 되었고, 이 공간을 통해 여러 가지 요구를 관철시키기에 이른다.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 중에서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복지에 대한 요구로서, 시민사회의 요구에 국가가 반응한 결과는 사회복지지출의 꾸준한 확대에서 발견된다. 1990년 GDP 대비 3.16%에 불과하던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은 그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12.17%까지 증대되었다. 물론 아직까지는 유럽, 북미, 일본 등 선진국에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20년간 이토록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특히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은 시민사회의 꾸준한 주거권 요구에 대한 정부의 반응의 결과이다.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가격폭등, 주택난 등의 문제로 서민들의 주거권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자, 국민의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했고, 참여정부는 이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계획을 추진했다. 또한 주택재개발의 절차의 합리화 주거복지의 확대 등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도 확대되었다. 2003년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으로 공영개발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고, 2003년 6월에는 최저주거기준이 주택법에 삽입되었다.

2) 지방자치와 시민사회 활동공간의 확장

권위주의의 해체와 민주주의의 진전이 한국에서 시민사회의 활동공간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된 결정적 계기 중의 하나는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라고 할 수 있다. 1961년 5·16 군부 쿠데타 이후 폐지되었던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접선거가 이뤄짐으로써 다시 부활하기에 이른다. 34년 만에 부활한 직선제 지방자치제는 지역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활동공간을 현저히 확장시켰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었다. 반면 국가에 대해서 지방정부는 더 많은 자율성을 갖게 되었다.¹⁸⁾ 이에 따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주민 운동단체들은 지방정부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운동단체들은 지방선거에 개입하거나

18) 박인권(1999)은 국책사업의 집행을 둘러싼 갈등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지역주민 ‘대표’ 기능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위는 궁극적으로 국가가 정해 놓은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로 제약된다.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지방정부가 시민사회의 주된 운동세력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함에 따라, 이들 시민 조직들이 상시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통로도 열리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는 주민들 개인의 권리의식과 참여 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의 저항/대안운동도 합법적인 정치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통치체제는 이러한 지방화의 흐름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사회의 주민조직에게 더 많은 참여기회와 더 많은 자원을 제공했다. 2000년 3월에는 ‘조례 제·개·폐 청구권’(주민발의제도)이 시행 되면서 주민조직이 직접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등이 주민들과 파트너십의 관계를 형성하며 제도권의 자원이 시민사회로 직접 유입될 여지가 커지게 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시정부의 리더십의 변화에 따라 시정부-시민사회 간 협력적 관계에 부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조순, 고건,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 시장 체제로 변화를 겪어오면서 그 관계가 때론 소원할 때도 있었으나, 시간에 흐름에 따라 대체로 시정부는 점차 시민사회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파트너로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박원순 시장 체제 하에서는 시정부-시민사회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여, 시민사회의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3)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의 확장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가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를 통해 확장되고 있다는 것 또한 서울시민의 저항/대안 활동공간을 규정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앞서 제시한 민주주의의 진전과 지방자치의 확대가 대체로 국가-시민사회의 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만들고 시민사회의 활동공간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다면, 신자유주의의 확대는 국가가 시민사회에 반응

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제동을 걸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활동공간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처럼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확장되는 데는 앞서 제시한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과 더불어 국내의 어려운 경제상황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특히 1997년 IMF 구제금융은 한국 자본주의 축적의 위기를 드러내는 일대 사건이었다. 1980년대까지 고도성장을 거듭해오던 한국경제는 IMF 경제위기 이후 구조적 저성장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는 그간 한국이 고도성장을 이끌어오던 발전국가 자체의 위기로서 국가-시장 관계에 대한 근본적 방향전환을 요구하게 되었다(양재진, 2005).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는 국가 역할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간섭과 개입을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가가 시민사회에 반응하여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의 양을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가는 이러한 일련의 친시장적 신자유주의적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998년 국민의 정부 탄생으로 가능성이 열린 복지국가의 실현은 이러한 경제조건의 악화와 신자유주의 질서의 확장으로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민의 정부는 민영화의 확대, 생산적 복지의 실현 등과 같은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타협을 추진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국민의 정부는 출범과 함께 분양가 및 분양제도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경기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여 부동산 폭등을 유발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역시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확대,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 등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외적 경제 조건의 악화와 신자유주의의 세계적인 확산에 직면하여 보수적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7년 4월에 한-미 양국 간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국가 간 자유무역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국민경제의 경계를 제거하여 시민의 삶이 세계시장의 경쟁 체제에 노출되게 하는 결과는 낳는다. 이는 시장-시

민사회 간 관계에서 시민의 삶을 시장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국가의 중재역할을 심대히 축소시킨다. 이 때문에 당시 참여정부는 시민사회의 많은 반발과 저항에 직면해야 했다. 그럼에는 이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국회의 비준을 얻어 발효되었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체제는 2000년대 들어 꾸준히 확대되었다. 2002년에 취임한 이명박 시장은 뉴타운 개발을 추진했다.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난개발 방지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실상은 서울시 내 낙후지역의 경제개발이라는 목적, 시장의 합리화 요구에 시정부가 부응한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최병두, 2012). 이 과정에서 시정부는 기존 규제의 조정 또는 완화, 수용권(eminent domain)의 행사, 시민사회의 의견 무시 등의 행태를 보였다. 이는 결국 시민사회의 엄청난 저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용산참사는 이처럼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삶의 세계를 지키려는 시민사회의 저항이 국가 및 지방 정치체제의 보수주의와 충돌을 일으키며 나타난 비극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5. 서울시민의 저항/대안 운동의 변화 분석

서울 시민사회 공간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서울시민의 저항과 대안운동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 및 지방정치 체제의 변화에 대응한 서울 시민운동들의 성격변화, 운동 주체의 변화, 활동영역 및 영향력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1) 운동 성격의 변화

3장에서 살펴본 서울 주민의 저항/대안운동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운동단체는 활동영역과 주체를 변화시키면서 설립 당시의 목표를 실현시키고자 다양하게 활동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각 단체 내부의 역량과 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각 시민단체가 맺고 있는 지역사회, 지방정부, 국가와의 관계 변화에 반응한 결과이다. 각 시민사회단체는 사안과 정국에 따라 자신들의 운동 방향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저항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제도권과 협력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의 저항/대안운동이 지난 20여 년간 보인 성격의 변화를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요약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운동의 구체적 영역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 중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주요대상이 다르고, 국가-지방정부의 정책 간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우선 지역공동체·주민자치 운동은 각 운동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와의 관계가 운동성격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 종류의 운동은 서울시와 각 구청의 정책과 지방자치 상황에 좀 더 밀접하게,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 운동에게는 지방자치제의 확대가 합법적 활동공간의 확대를 의미하여, 꾸준히 자신들의 활동공간을 넓혀올 수 있었고 운동의 성격도 대체로 체제 내적 활동이 많았다.

노점운동 역시 지방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변화해왔다.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의 정책에 따라 협력적 관계가 되기도 하고 저항적 관계가 되기도 했다. 어떤 지역에서는 지방정부가 노점상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도 하여, 지역별로 차별적인 운동 대책이 수립되기도 했다(홍인옥, 1999). 한편에서는 좌판과 손수레 정비 등에 대한 노점 정책을 제시하여 일부 노점상을 포섭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정책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는 노점상을 탄압하기도 했다(김준희, 2012). 이에 따라서 노점운동은 강력한 단속에 이뤄지

는 곳에서는 물리적 투쟁 방식을 동원하고, 정부의 개량화 정책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양면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권 운동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랐다. 주택정책이 지방정부보다는 국가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자치제도 실시로 인한 변화에 덜 민감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재개발과 같은 도시개발의 인허가권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양되었지만, 주택과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여전히 자본과 국가의 논리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국가 정책에 따라 운동의 성격이 크게 좌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거복지 확대 및 재개발 철차의 합리화 정책이 추진되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주거연합, 주거복지연대, 나눔과 미래 등 합법적 정책대안 운동이 힘을 얻어 발전할 수 있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친시장적 주택·도시개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전철연과 같은 전투적 조직의 활동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했다.

생협운동도 주거권 운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의 영향을 그다지 많이 받지 않았다. 생협의 주된 활동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원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와의 관계가 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확대나 지방정부의 정책에 따라 운동의 성격이 달라졌다기보다는 꾸준한 시민사회의 확대에 따라 전반적으로 활동공간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시행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협동조합이 각 지역에서 정착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역시 가지고 있다.

국가와 서울 지방정치체제 리더십의 불일치가 존재함에 따라 서울의 저항/대안운동의 대응이 동요해왔다는 점 또한 지적할 필요가 있다. 보수적 국가 정치체제였던 문민정부 시절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조순 시장 체제가 들어서서 국가-시정부의 리더십 간 불일치가 존재했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보수적인 이명박 시장 체제가 들어서서 역시 불

일치가 존재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역시 개혁적인 박원순 시장 체제와 균열이 존재한다. 이처럼 국가-시정부 정치적 리더십의 불일치는 국가와 지방 정치체제의 변화가 시민사회 활동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있어 한계를 노정하게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민운동 또한 운동 부문 및 사안의 성격에 저항과 참여 사이에서 동요하며 대응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국가와 시정부에 더 높일 수 있게 됨에 따라 활동의 영역이 조금씩 다양화되고 넓어져왔으며, 현 박원순 시장 체제에 들어서는 각 단체 활동의 스펙트럼이 좀 더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2) 운동 주체의 변화

1990년대 초기 주민운동은 과거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통해 훈련된 활동가들이 운동의 핵심세력으로 운동을 이끌었다. 그러다 점차 각 영역에서 활동에 참여하면서 교육받은 주민들이 중심세력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들이 자신들의 삶의 질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히 참여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물론 운동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주거권 운동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운동으로 발전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였다. 우선 전철협, 전철연 등과 같은 철거반대운동 단체들의 경우에는 철거라는 일시적 상황에서 벌어지는 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민참여와 주민활동가 양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철거민은 사실 일시적 신분에 지나지 않아서 철거문제가 마무리되면 주민들은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주거연합이나 주거복지연대 등과 같이 제도 개선을 위해 운동을 벌이는 단체들 역시 주민들을 운동의 핵심세력으로 끌어안지는 못했다. 주거약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와 주거권 확보 등은 주로 선진 활동가 위주의 활동이어서 지역주민들이 운동의 주체로 전면에서 나서기

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노점상 운동의 경우에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출신의 의식 있는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일시에 운동단체가 설립되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기 활동가들의 구성이 조금씩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리하여 점차 사회복지 전공자들과 노점상 출신의 활동가들의 참여가 증가했다. 그러나 노점상 출신의 활동가들의 수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노점상 출신으로 직접 단체 활동에 참여했다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노점으로 돌아가야만 하고, 그 속에서 꾸준히 운동에 의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공간이 마련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철거투쟁 이후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한 주민자치운동을 진행해온 경우에는 좀 더 주민 출신 활동가가 많고,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성동주민회와 관악주민연대의 경우에 확인된다. 그러나 이들 단체에서도 철거투쟁이라는 이슈가 마무리되고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생활 공감대가 사라지면서 힘든 시기를 겪은 적도 있다(신만수, 2012). 많은 지역공동체 운동들이 이를 극복하여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기반을 넓히지 못하고 여전히 소수의 활동가가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¹⁹⁾

일반 주민의 참여가 가장 많이 증대된 영역은 생협운동 부문인데, 이는 먹을거리라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운동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생협운동에는 일반 조합원으로서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서 벗어나서, 제품의 기획에서 생산, 검사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 참여하는 사례가 많다. 경연진은 과거 노동운동과 진보운동 출신 활동가들이 많이 있으나, 이사진과 실무 간사들은 일반 조합원으로 활동하던 주부들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생협의 운동에서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조합원 교육이 이뤄낸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주민들

19) 지역공동체 운동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점은 초기부터 함께 한 주민들과 나중에 들어온 주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주민운동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차이로 인해 참여도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줄여나가야만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운동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곽충근 관악주민연대 사무국장인터뷰, 2012.10.31).

이 다양한 경험과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생협운동의 목표를 체화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조합의 활동과 사회운동의 주체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3) 활동영역의 변화와 영향력 증대

지난 20여 년간 서울의 저항/대안운동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활동영역이 확장되었고, 법과 제도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주거권 운동에서부터 지역공동체 운동, 생협운동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운동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확대와 관련이 깊다.

주거권 운동의 경우 과거에는 생존권(철거 반대와 철거민을 위한 주택 공급) 수호가 주된 영역이었으나, 여러 가지 법과 제도로 기본권 보장이 이뤄짐에 따라 좀 더 폭 넓은 영역에서 저항과 대안을 추구했다. 2007년부터 민간단체인 사랑의 열매 지원으로 나눔과 미래와 주거연합은 각각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여 시범 운영하면서 기존의 공공부문에서 제공하지 못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다. 공공 임대주택 상담, 주거비지원제도 안내, 간편 집수리 실시, 관내 무료 부동산 중개 및 임대차관련 상담 등을 진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주거권 증진을 꾀했다. 주로 민간 자원을 이용하여 주거복지센터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도 생겨나고 있다.

단순한 철거 반대 투쟁과 그 속에서 고통 받는 주민들을 도와주는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대안개발을 제시하고 실제로 개발에 참여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나눔과 미래가 은평구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두꺼비하우징사업’, 주거복지연대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단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대안적 사업들은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나눔하우징,

희망하우징 등)의 형태로 진행됨으로써, 주거약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삶의 질도 높이는 이중의 효과를 갖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기존의 국가와 시장을 통해서 충족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함과 동시에, 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키울 수 있게 함으로써 주거복지 실현과 마을공동체 성장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장점이 있다 (주거복지연대 남상오 사무총장 인터뷰, 2012.10.29).

이처럼 1990년대 초 철거반대운동에서 시작한 주거권 운동이, 거주민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을 만들고, 주거재생과 주거복지에 기반을 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는 등 각 시대의 현안에 맞춰 유연적으로 운동의 방향과 영역을 변화시켜왔다. 이 속에서 공공 또는 다른 시민사회와 협력을 한 단체들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이 증대되고, 그들의 활동이 제도화되기도 했다. 이와 달리 전철연이나 전철협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에도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형성하지 못하고 점차 활동이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용산참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국가와 시장의 폭력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들 전투적인 주거권 운동단체들의 저항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²⁰⁾

노점운동의 경우, 노점상 자체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 운동의 규모 면에서는 약화되고 있으나 지방정부와의 관계는 점차 협력적 관계로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노점관리대책을 도입하여 노점을 일정한 수로 묶어두고 유도구역으로 노점을 이동시켜왔다. 새로 유입되는 노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단속이 이뤄져 노점의 활동 범위가 줄어들고 있다. 또한 유통체계의 변화로 노점이 잘 되는 품목과 장소가 한정되어 있으며, 노점의 유형도 다양화(예, 지하철 행상, 이동형 노점상)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노점운동은 운동규모나 연대 측면에서 많이 약화되고

20) 두 단체는 국가와 시장이 철거민을 사회불안을 형성하는 세력으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철거민을 탄압하는 정책을 지속하기 때문에 용산참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 단체는 국가와 시장의 이러한 인식과 태도에 대전환이 없다면 그들의 대응 또한 바뀔 이유가 없다고 항변한다.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와의 의사통로는 과거에 비해 확보되어 왔으며, 특히 박원순 시장 체제에 들어서는 최초로 시장과 면담이 성사되기도 하는 등 합법적 의사개진 공간이 확대되었다(최인기 민노련 사무처장 인터뷰, 2012.11.13).

지역공동체 운동도 참여하는 지역주민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의 영역을 점차 확대시켜나갔다. 성동주민회와 관악주민연대는 주거권 운동단체가 운영하던 주거복지센터를 각 지역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다른 지역공동체 운동 역시 각 지역의 생활의제나 이슈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생활정치운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아래로부터 시민사회 내 자발적 결사를 복원해나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경험은 현재 가장 중요한 서울시 사업으로 등장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영향을 미쳤고,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 기존의 주민공동체 운동가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민관협력의 파트너십도 증대되어가고 있다.

생협운동 역시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대중적 기반이 넓어짐에 따라 일반 시민운동 영역으로까지 그 활동영역을 점차 넓혀왔다. 과거에는 FTA반대, 광우병 문제,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와 같이 먹거리 문제에 집중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공공정책에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탈핵문제, 투표시간 연장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하면서 일반 시민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생협이 이처럼 다양한 의제에 대해 여론형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지역마다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마을모임을 통해서이다. 매달 조합원들이 마을 모임을 통해 생협 소식을 교환하고, 각종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협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지역주민과 조합원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강연회, 동아리 모임 등을 제공하는 생협센터를 지역별로 설립하고 있다. 생협센터가 계획대로 전국적으로 설립·운영되면 생협이 지역공동체 운동의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영향력 또한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6. 결론

우리는 서두에서 용산참사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서 단적으로 드러난 서울의 시민사회를 둘러싼 권력관계의 양면성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다시 말해 한편에서는 국가-시민사회의 관계가 억압-저항의 관계로, 다른 한편에서는 협력-참여의 관계의 관계로 완전히 상반되게 나타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를 묻는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지난 20여 년간 변화해 온 시민사회의 저항과 대안의 공간 및 운동의 변화를 국가-시장-시민사회 삼각관계라는 틀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특히 우리는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의 확대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이라는 모순적 계기가 한국의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의 변화를 규정해왔음을 규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적 계기가 그 삼각관계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시민사회를 둘러싼 권력관계의 양면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혔다.

먼저 한국의 국가는 지난 20여 년간 시장과 시민사회 사이에서 매우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처한 발전국가는 시민사회와 시장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점차적으로 잃고 시장과 시민사회에서 줄타기를 해왔다. 한편으로는 경제성장과 민주화 운동을 통해 성장한 시민사회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른 시장의 자유화 요구에 직면하여 복지국가의 원칙들을 포기하고 자유시장질서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게 된다. 다음으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운동들은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얻어낸 확장된 자신들의 활동공간을 활용하여 체제 내적인 활동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와 함께 끊임없이 영역을 확대하는 시장과 이에 포섭된 국가에 대한 저항운동 역시 지속해왔음을 살펴보았다. 전투적·혁명적 시민운동으로부터 참여적·개혁적 시민운동으로 중심이 이동해온 것이 큰 대세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국가와 시정부의 폭력성에 저항하는 운동 역시 지속되어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시장-시민사회 관계의 불안정한 균형 상태 속에서 지방정치 체제는 시장과 시민사회를 왔다갔다 해왔고, 주민운동의 지배적 활동방식 역시 구체적 지방정치체제의 변화에 따라 동요해왔다. 조순-고건의 개혁적 리더십에서 이명박-오세훈의 보수적 리더십으로, 다시 박원순의 개혁적 리더십으로 진동했고, 서울시민의 주민운동의 지배적 활동방식 또한 정치체제의 동요에 따라 참여적 방식과 저항적 방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왔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20년간 서울시민의 저항과 대안의 운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 그리고 이의 변화를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두 계기 속에서 찾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확대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이라는 모순적 계기가 이루고 있는 균형은 국가와 서울의 정치체제에서 진보적 또는 보수적 리더십의 출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한 정치체제 내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의 채택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정치체제와 정책이 서울시민의 저항과 대안 운동의 공간을 규정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모순적 두 계기가 이루고 있는 균형은 두 가지 계기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상호 균열을 일으키며 시장과 시민사회 사이를 진동하며 이루는 동적 균형이다. 따라서 구체적 도시공간에서 실현되는 균형점은 시장과 시민사회의 ‘운동’에 의해 변화하게 마련이다. 서울시민의 저항과 대안 운동은 바로 이 균형점을 이동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일단 형성된 균형은 다시 서울시민의 운동 공간을 규정하는 변증법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이 점에서 서울시민의 운동이 지니는 실천적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²¹⁾ 즉 서울이라는 도시공간에서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 위태롭게 형성된 균형점은 시민들의 저항과 대안운동에 의해 민주주의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평

21)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지구·지방적 운동에 대해서는 최병두(2011) 참조.

화와 폭력, 문명과 야만이 공존하는 세계에서 폭력과 야만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운동에 달려 있다 하겠다.

❖ Abstract

Analyzing Changes in Space and Movements
for Opposition and Alternatives in Seoul

Park, In-Kwon·Lee, Seon-Young

The recent ‘Yongsan-tragedy’ and Community Building Projects represent a duality of power relationship around civil society in Seoul. While the state-civil society relation is characterized by oppression and opposition in the first case, it is characterized by cooperation and participation in the second. This study seeks the source of this duality by analyzing changes in space and movements for opposition and alternatives in Seoul over the past 20 years, using the triadic framework of the state-the market-civil society. We explain that expansion of democracy and neo-liberalism as counteracting forces affects the triadic relations, leading to the duality of power relation around civil society in Seoul. Opportunistic behaviors of the state and local regime, institutionalization of urban social movements, and coexistence of participatory and oppositionary movements are all outcomes of the two contradictory occasions. From these findings, we derive practical implications for citizens’ movements in Seoul.

Keywords: civil society, the state, the market, citizens’ movements, neo-liberalism.

참고문헌

- icoop생협연구소. 2008.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역사: 사람, 함께 모여 희망의 씨앗을 심다>(동영상자료).
- 권은정. 2009.3.12. 『금호동 철거민 유이사 사고 치다』. 《프레시안》.
- 김준희. 2012. 『노점상운동의 역사와 주요 쟁점』. 《도시와 빈곤》, 제97호, 58~73.
- 남원석. 2004. 『주거빈곤과 한국도시연구소 10년』. 《도시와 빈곤》, 제71호, 53~62.
- 박배균. 2006.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에서 ‘신자유주의화’의 공간성에 대한 연구: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공간 선택적 자유화’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통권 25호, 8~40.
- 박인권. 1999. 『지방자치의 실시와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 영광원전 건설 갈등 심화의 원인과 파급효과』. 《공간과 사회》, 통권 11호, 211~239.
- 성동주민회. 2011. 『성동주민회 소개자료』(<http://cafe.daum.net/sdpeople30>).
- 신만수. 2012. 『성동지역 주민운동 이야기, 비전은 계속된다』. 『주거권 운동과 주민운동』,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공동 심포지엄 자료집, 57~70.
- 신명호. 2004. 『한국도시연구소의 역사』. 《도시와 빈곤》, 제71호, 29~33.
- 신철영. 2012. 『1970년대 한국 협동조합의 민주주의 지향성』. 《생활평론》, 제6호, 73~85.
- 안수찬. 2009.2.9. 『폭력투쟁? 이웃의 죽음을 모욕 말라』. 《한겨레 21》, 통권 746호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4275.html).
- 양재진. 2005. 『발전이후 발전주의론: 한국 발전국가의 성장, 위기, 그리고 미래』. 《한국행정학보》, 제39권 제1호, 1~18.
- 유창복. 2009. 『도시 속 마을공동체 형성과 전개에 대한 사례연구: 성미산 사람들의 마을하기』. 성공회대학교 시민단체학과 석사논문.
- _____. 2010. 『나의 마을살이 10년: 이제 마을하자』. 《진보평론》, 제43호, 55~99.
- 이종환. 2010. 『관악주민연대 16년의 역사에 대한 성찰』. 관악주민연대 비전위크샵 자료집(<http://www.pska21.or.kr>).
- 전국노점상총연합. 2007. 『사진으로 보는 전노련 역사』. 도시빈민운동자료 (<http://cafe.daum.net/poor1004>).
- 전철연. 2004. 『철거민 투쟁사』. 전철연 홈페이지(<http://pw87.jinbo.net>).
- 조대엽. 1995. 『한국에서의 사회운동연구』. 《경제와 사회》, 제27호, 166~191.
- 최병두. 2011. 『탈신자유주의를 위한 대안적 도시 전략』. 《공간과 사회》, 제21권 3호(통권37호), 5~38.
- _____. 2012. 『자본의 도시: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와 도시정책』. 한울아카데미.
- 최인기. 2012a. 『가난의 시대』. 동녘.
- _____. 2012b. 『노점상운동의 역사. 90년대를 중심으로』. 반빈곤운동사세미나, 한국

도시연구소.

- _____. 2012c. 『빈민운동의 열사와 역사』. 민노련 홈페이지(<http://cafe.naver.com/new-nojum>).
- 한국도시연구소 1999. 『지역주민운동 리포트』. 한국도시연구소(연구보고 99-2).
- 홍인우. 1999. 『노점상 문제의 현황 및 갈등 구조 분석』. 《도시연구》, 제5호, 37~59.
- Abu-Lughod, Janet. 1998. "Civil/uncivil society: Confusing form with content." in Mike Douglass and John Friedmann(eds.). *Cities for Citizens: Planning and the Rise of Civil Society in a Global Age*, London: Wiley, 227~237.
- Agnew, John. 2002.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R. J. Johnston, Peter J. Taylor, and Michael Watts(eds.). *Geographies of Global Change*. Wiley-Blackwell.
- Boas, Taylor C. and Jordan Gans-Morse. 2009. "Neoliberalism: From New Liberal Philosophy to Anti-Liberal Slogan."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44(2), 137~161.
- Brenner, Neil, Peter Marcuse, and Margit Mayer. 2012. *Cities for People, Not for Profit: Critical Urban Theory and the Right to the C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astells, Manuel. 1977. *The Urban Question: A Marxist Approach*. London: Edward Arnold.
- Cohen, Jean L., and Andrew Arato. 1992.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Cambridge: The MIT Press.
- Edwards, Michael. 2004. *Civil Society*. Cambridge, England: Polity Press. 서유경 역. 2005. 『시민사회: 이론과 역사, 그리고 대안적 재구성』. 도서출판 동아시아.
- Ehrenberg, John. 1999. *Civil Society: The Critical History of an Idea*.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Flyvbjerg, Bent. 1998. "Habermas and Foucault: Thinkers for Civil Societ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9(2), 210~233.
- Jessop, Bob. 1982, *The Capitalist State*. Oxford: Martin Robertson.
- Johnson, Chalmers. 1982.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sch, Christopher. 1996. *The Revolt of the Elites and the Betrayal of Democracy*. New York: W. W. Norton.
- Pollock, Graham. 2001. "Civil Society Theory and Euro-Nationalism." *Studies in Social & Political Thought*, 4, 31~56.
- Putnam, Robert D., Robert Leonardi, and Raffaella Y. Nanetti. 1994.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omers, Margaret R. 2008. *Genealogies of Citizenship: Markets, Statelessness and the Right to Have Righ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orper, Michael. 1998. "Civil Society: Three Ways Into a Problem." in Mike Douglass and John Friedmann(eds.). *Cities for Citizens: Planning and the Rise of Civil Society in a Global Age*. London: Wiley.
- Walzer, Michael. 1998. "The Idea of Civil Society: A Path to Social Reconstruction." in E.J. Dionne, Jr.(ed.). *Community Works: The Revival of Civil Society in America*.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 Wright, Erik Olin. 2010. *Envisioning Real Utopias*. London: Verso.
- _____. 2011. "The 'triadic' model of society in Somers' Genealogies of Citizenship." *Socio-Economic Review*, 9(2), 405~418.
- Yiftachel, Oren. 1998. "Planning and social control: Exploring the dark side."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12(4), 395~406.
- Zaleski, Pawel. 2006. "Global Non-governmental Administrative System: Geosociology of the Third Sector." in Dariusz Gawin and Piotr Glinski(eds.). *Civil Society in the Making*. Sarszawa: IFiS Publishers.